

ISSUE & FOCUS

Newsletter 2017-4(2)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안보·국방 분야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북핵 대응이 최우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 또는 참모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분명하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불릴 정도로 위력이 크고, 다수가 사용되면 수백만의 남북한 주민들이 사망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대로 변모하여 한민족의 영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이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물론이고 참모들도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해결책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노력,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고도 효과가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의 흥분에 취해있을 여유가 없다. 헌법 제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대통령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없다. 북핵 위협 대응을 모든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고화

북핵 대응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안보 사안은 한미동맹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효율적 국방을 추진했고, 그리하여 경제개발에 매진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 대신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도발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상당한 반미정서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은 10위권의 경제대국답지 않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자존심을 상한 상태이고,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보수정권에 대한 반발심으로 반미감정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기도 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수 대선주자들은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 주도의 사령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 없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능을 향상시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동맹만 약화되면 북한은 바로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여 그들의 조건대로 한국과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당선인은 대선의 도중에 어떠한 말을 하였든 공고한 한미관계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고, 그것을 손상하는 결정은 뒤로 미뤄야 한다.

한일 및 한중관계의 방향 정립

당선인은 한일관계의 추진 방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국민적 정서와 현실적 필요성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상당한 반일감정을 갖고 있고,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국민 간의 불신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정보력을 활용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려면 일본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원활한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사안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적극 옹호하였다. 최근에는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를 두고서 한국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반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 시각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안보협력을 제공할 수가 없고, 한국은 북핵 대응을 위하여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이 균형정책을 취한 결과로 중국의 기대를 크게 만들었고, 따라서 이후 양국 관계에서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중국과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중관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할 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더라도 경제적 관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해온 ‘국방개혁 2020’이 계획에 비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받은 다음에 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국방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북핵 대응력 구비가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이고, 국방관리의 효율화와 대민 신뢰강화가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구비한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선인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국방분야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국방분야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발탁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할 이다. 청와대, 국정원,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안보분야를 실무적으로 담당할 장관, 차관, 차관보들도 대선에서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중심으로 인선하여야하고, 그

러한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초당적, 범국가적 국가안보태세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 · 국방은 신중할 필요

당선인은 대선 때 제시하였던 안보 및 국방 분야의 제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이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당선인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모병제 등 병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북핵 위협 정도를 평가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더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당선인의 경우 안보와 국방분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국내정치적 요소에 상당한 관심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안보 및 국방분야의 제반 사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 및 국방분야의 경우 초기에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북핵 대응, 한미동맹과 한일 및 한중관계, 국방개혁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장관 및 참모들을 최적의 인사로 임명한 후 나머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고민하여 천천히 결정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